

제 1세션. 글로벌 리더십과 중견국가의 역할

- ‘글로벌 리더십과 중견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쌓아온 리더십 자산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의 시각에서 본 중견국가의 역할과 한국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함.

“An American View on Korea's Global Leadership Role”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본 발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오랜 우방국인 미국의 시각에서 설명함. 최근 발효된 한미FTA는 양국 관계 증진에는 물론 지역 안정 및 번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며, 한국이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희망함.
-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한국은 최근 부상하기 시작한 많은 신흥경제국 및 중견국가에 모범사례(Role Model)를 보여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 냉전종식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중심적 질서에서 다극화로의 국제질서 개편과정에서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하에 G20정상회담·핵안보정상회담 등 다양한 회의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한국의 많은 기여가 요구됨.

- 다자협력관계 및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 구축이 시급한 오늘날 한국이 주최하는 본 회의는 주제의 시의성 및 적절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함. 더 나아가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 상호의존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정의하는데 한국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여 주기를 기대함.

“Korea as a Global Bridging Power” 글로벌 가교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본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정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중재자로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국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중견국가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글로벌 리더십이란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공동선)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모범사례(Role Model)로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이뤄진 리더십 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양자와 다자외교를 통해 연대를 형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 전략의 요체임.
- 자유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지지하며 특정 의제에 초점을 맞춰 틈새외교(Niche Diplomacy)를 펼치는 기존의 중견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동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개발(Development) 문제를 다루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설득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한국의 국력과 국격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평이 열림.

○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음.

- 대한민국의 1인당 GDP(경상 기준)는 1960년 156달러에서 2010년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 통상 산업국가로 도약하였음.

- 또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전세계 187개국 중 15위에 올랐고, 교육·보건·소득 등 여러 측면에서 고른 발전을 해오고 있음.

- 아직까지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쟁선거·언론의 자유·반부패 등 정치 제반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

□ 1990년대 이후 신흥 강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로 인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재편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 강국이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에너지·금융 등 주요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음.

□ 이처럼 오늘날은 축적된 리더십 자산과 변화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임.

○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군사·경제력 등 Hard Power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Soft Power도 함께 배양하여 균형 있는 리더십 자산을 확보해야 함.

- 올바른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목표설정 시 국익을 넘어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공공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행위주체 전환이 필요함.
-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하여 확인된 조직력 등의 물리적 역량과 G20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 및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음.

“A Middle-Power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한국과 일본의 중견국 파트너십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 본 발표에서는 중견국의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일본이 수행해 온 노력에 대해 언급, 양국이 공통 과제에 직면한 중견국 파트너십을 강조함. 또한 일본의 보수적 국내정치 요인으로 인한 동아시아지역 질서재편과 다자협력 실현의 어려움을 설명함.
- 중견국은 영토의 크기가 아닌 국제사회의 국가 순위로 결정되며 중견국의 전략에는 강대국의 특성으로 알려진 일방주의가 부재함.
 - 중견국은 지역·글로벌 거버넌스, 인간안보, 비전통 안보분야 등 소프트한 국제적 이슈를 다루는 데 효과적 역할을 수행하며, 중견국들 간 상호협력을 통해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비전통 안보 및 실용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북관계 관련 새로운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은 한국의 중요한 책임으로 간주됨.
 - 6자회담 등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효과적 통로 마련

- 또한 한국은 G20 회원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과 일본은 중견국가로서 안보 관련 연계가 있으며, 양국은 파트너 국가로 글로벌 질서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공통의 도전과 기회에 직면함.
 - 일본은 핵 확산방지, 국제경제 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 빈곤 감축 등 중견국가들의 전형적 중점분야에 재정적,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개발 및 통합에 주력했음.

□ 일본 국내정치의 혼란과 주변국의 고정관념은 일본이 다른 중견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저해함.

- 일본 대외외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보수적 성향은 영토분쟁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국내정치의 구시대적 성향을 더욱 고취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여 중견국간 긴밀한 협력을 방해함.
- 냉전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다자협력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변국과의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주변국들의 불신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일본은 중견국으로서 향후에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 등 주변국에서 대여론 외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여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

“Change and Continuity in Canada's Middle Power Model: Lessons for Korea”

캐나다 중견국가 모델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에의 함의

앤디 쿠퍼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명예연구위원

- 본 발표는 캐나다의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에서 ‘틈새외교(Niche Diplomacy)’로 이어지는 중견국가 모델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하였음.
 -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양자외교 채널과 함께 다자외교적 관점에서 특정 전문화된 분야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익을 결합하고 이를 국민통합(national unity)에 활용
 - 그러나 미국 추종적 외교정책에 대한 반발이 대두되고 ‘국제정의 구현’보다 ‘국제질서 유지’를 중시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면서 캐나다의 외교정책은 ‘틈새외교’로 변화되었음.
- 1990년대 로이드 액스월시(Lloyd Axworthy) 외무부 장관 주도 하에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조성자 및 강대국간 이해대립의 중재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틈새외교’ 전략을 도입,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새로운 정책초점으로 채택하였음.
 - 캐나다는 개별국가로서 처음으로 ‘인간안보’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 다자간 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인지뢰금지운동(Anti-Personnel Land Mines Campaign)의 목표는 지뢰의 위협에 노출된 수백만 인명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음.
 - 통상이익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앞서 나간다는 ‘이상적인 대외원조’ 목표로,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을 주도 했음.

- 9.11 테러 이후 스티븐 하퍼(Steven Harper) 총리는 가능주의 (Functionalism)와 틈새외교(Niche Diplomacy)를 병행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는 아프간에 군대 파견 후 재건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티 등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도 많은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 동시에 자국의 적극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정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되면서 GNP대비 캐나다의 ODA 기여율은 1985년 수준으로 낮아졌음.
- 이러한 캐나다의 변화과정이 오늘날의 한국에 가지는 함의는 중견국가 모델(Middle Power Model)은 단순한 국가브랜드 또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축되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임. 또한, 한번 구축된 모델을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발전시켜나갈 때 비로소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 있음.

“Middle Powers: An Australian Perspective”
중견국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각

존 라벤힐 호주국립대 교수

- 본 발표에서는 1945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정책의 화두가 되어 온 ‘중견국가’의 개념을 소개한 후 중견국가 외교의 주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해 한국에 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였음.
- 중견국가의 외교 기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like-minded) 국가들을 규합하여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의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자유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임.

○ 중견국가 지위의 요건은 6Cs로 규정될 수 있음.

- Capacity(역량): 중견국가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보유
- Concentration of Resources and Effort(집중): 초강대국에 비해 역량 제약이 있으므로 제한적 범주의 의제에 초점
- Commitment(의지): 역량을 보유할 뿐 아니라 이를 실제 활용할 의지
- Creativity(창의성): 합의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지적 능력
- Coalition-Building(연대 구축):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규합
- Credibility(신뢰성): 공정한 중재자로 행동할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

□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견국가 외교 사례를 보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신뢰성 확보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

○ 성공사례로서는 캄보디아 평화협정, APEC 출범, 화학무기 협약, Cairns Group 등을 들 수 있음.

○ 실패사례로서는 1984년 군비철폐(Disarmament) 제안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제안을 들 수 있음.

- 군비철폐 제안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는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져 소련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
-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제안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

제 2세션. 외교·안보 이슈

- 본 세션에서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추진한 신아시아외교에 대해 논의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동맹 전략 및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설명함.
-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안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이재현,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담당 연구위원, 히카루 야마시타 일본방위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

“Korea's New Asia Diplomacy and the Way Forwards” 신아시아 외교의 성과와 글로벌 중견국의 과제

이재현 국립외교원 교수

- 본 발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신아시아외교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논의
- 신아시아외교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기대와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ASEAN,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 한국의 대외적 능력이 신장되고 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이 향상되면서 신아시아외교를 추진
- ASEAN과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상호이익 관계를 형성했으며, 호주 및 인도는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

□ 신아시아외교는 경제개발협력, 녹색성장·기후변화 협력, 사회문화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많은 양자 및 다자 이니셔티브를 수립, 수행해 왔음.

○ FTA, ODA 확대, 지식공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지원, 기술협력, 한-ASEAN 센터 설립 등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졌으며, 한-ASEAN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 간 정치·안보 협력의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 한편, FTA를 통해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협력을 추진했으며, 호주와 글로벌 안보협력 향상 액션플랜을 수립함.

○ 한국은 중견국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글로벌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호주 및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

□ 신아시아외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했고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아시아에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

○ 역할 확대에 따라 한국에 대한 기대도 증가했으며 신아시아 외교의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견국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음.

□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ASEAN+3 등 지역 다자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외교의 중심에 아시아를 놓고 장기 지속적, 체계적인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를 수립해야 할 것임.

“Restor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US-ROK Alliance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더욱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로의 비전이 언급
 - 한반도에 국한된 이슈에서 지역적, 글로벌 이슈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안보 중심 아젠다를 경제·문화로 확대해야 할 것임.
 -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은 냉전종식 후 변모를 거쳐 온 반면, 한·미동맹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은 바, 한·미동맹의 비전은 냉전 후 변화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양국은 동맹의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에 돌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재정의하고, 공통된 전략적 목표와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결과를 명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2(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현재 군사관련 영역에 국한된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목표 및 운영방향 등을 논의해야 함.
 - 또한 향후과제로 대북정책을 수립, 효율적으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억제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미 양국이 대중국 외교의 비전을 공유할 것을 제안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 An Assessment and Suggestion”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평가와 제언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1세기 들어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중견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임.
 - 한국은 역사적 비침략사, 개발을 달성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의 이미지로 PKO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
 - 법제 정비차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2010)을 제정했으며, 2008년에는 외교통상부 주최로 UN PKO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함.
- PKO 활동을 통해 한국군의 국제화,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 역할 수행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 정치이슈화, 경찰 및 민간요원 부족 등이 한계로 남아있음.
 - (성과) 성공적 민사작전, 해적퇴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했으며, 글로벌 반테러 공조활동에 기여함.
 - (한계) UN 주도 이외의 PKO에 대한 정치이슈화, 민사 활동에 필요한 요원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어 있음.
- 한국은 가시적인 국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중견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고 국제규범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임.
 -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ODA와의 연계, 민간요원 및 경찰의 투입 방안 등에 대해 숙고해야 함.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Contributions and Achievements”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노력과 성과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핵안보 강화에 기여함.
 - 핵 안전과 방사능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감안해 정상회의 의제에 이를 포함하고 2014년 네덜란드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모멘텀을 지속하도록 함.
 -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6개국을 추가로 초청, 회원수를 늘림으로써 글로벌 핵안보 개선 확장의 발판을 마련
 -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노하우를 미국 등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핵안보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고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는 등 국익 향상에 기여
 - 한국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석자들 간 가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국제 안보분야에서 중견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입지를 구축함.
 -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한편, 한국의 선진 핵 산업을 소개하고 비핵화정책에 따라 핵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준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 핵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함.
 - 국제 핵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지속적인 협박을 가해오는 북한을 비교해 향후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 될 때 어느 국가가 통일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국제사회에게 단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음.

- 향후 한국은 국내적으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대외론 홍보를 해야 하며 향후 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세이프가드, 안보, 안정성을 추구하고 비책임적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orea's Expanding Global Role:
The Rise of a Middle Power”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중견국의 부상**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담당 연구위원

-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국제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 과거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전략을 가져왔음.
 - 그러나 현재 글로벌 코리아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 아래 한국은 개발과정에서 받은 국제 지원에 대한 화답으로 국제적 역할수행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은 1993년 이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왔으며, 아덴만 작전 등 반해적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지역 재건팀을 파견하고 2009년 이후에는 확산방지구상에 적극참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기여해 왔음.
- 한국은 국제안보를 위한 동맹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로 부상
 - 동맹관계에서 국제안정 및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의 능력을 확대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한편,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각 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긴장조성, 불안정 및 한정된 자원은 지속적 동맹의 도전과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이슈 및 예산의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됨.
-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제무역과 국제안보,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할 것임.

“Evolution of Peacekeeping: Trends and Countertrends” 평화유지활동의 확대: 경향과 역경향

히카루 야마시타 일본방위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의 확대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마련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에 새로운 전략적 환경을 마련했음.
 - 지난 20년간 평화유지활동은 과업별, 주체별, 사상 및 기대효과 등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확장되어왔으며, 최근 일부 차질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평화유지활동의 확장은 평화유지활동이 국내적·국제적인 안보 이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임.
- 오늘날 평화유지활동은 잠재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전문성과 능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제 3세션. 경제 · 통상 이슈

- 글로벌금융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정책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관해 논의함.
- 한국의 FTA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성과와 대·내외 해결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에너지자원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제통상분야의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를 모색함.

“Tiding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유한욱 KDI 연구위원

- 본 발표는 한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크게 3개 부문(재정 및 세제, 통화 · 금융 · 외환, 고용 및 민생대책)에서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향후 과제를 제시
-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미국의 저금리정책, 글로벌 불균형,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당국의 한계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로 확산됨.
 - 국내에는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실물경제에 충격을 미침.
- 타국에 비해 적극적이었던 재정 및 세제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위기 극복에 기여
 - 향후 과제로 재정규율 강화, 지출구조조정 추진, 안정적 세원 확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인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함.

○ 통화분야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기관 신용공급여력 확충 등은 위기 직후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자금흐름에 기여했으나 장기간 지속된 낮은 정책금리가 물가상승압력을 증대

- 향후 과제로 조심스러운 금리정상화를 제시함.

○ 금융분야의 주식·채권·파생상품·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선별적·예방적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규제체제 개선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다소 소극적이며 저축은행의 부실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음.

- 향후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고, 저축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 외환분야의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대책,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해외 IR 활동 등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 향후 과제로 외환부문의 기초체력 강화가 요구됨.

○ 고용 및 민생대책 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일자리창출 노력과 서민생활 지원 및 물가안정대책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넓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하에서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함.

□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위협요인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안정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우리경제는 수출-내수 부문 간 격차 심화, 물가상승압력 지속, 가계부채 급증, 남유럽·중국 등의 변동가능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불안지속 등의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 향후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수출-내수 균형성장, 일관된 구조조정정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및 외환부문 안정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함.

“Korea's FTA Network and Global Leadership” FTA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본 발표는 도하개발젠다 협상(DDA)의 표류,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 등 배경 하에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 FTA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함.
- 한국은 2012년 5월 현재, 45개국과 8개의 FTA를 발효함으로써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성과를 이뤄냄.
 - FTA를 통해 한국은 뛰어난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을 이룸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함.
 - 높은 수준에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함.
 - 다양한 분야에서 FTA에 대한 의견을 얻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가짐.
-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내·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음.
 - FTA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내부적 합의 부족, 낮은 FTA 활용률, FTA의 영향을 받는 국내분야에 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방 등 내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FTA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불충분한 DDA와 지역통합 노력 등 외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한국이 더욱 활발하게 다자통합에 참여해야 함.

“Mutually Beneficial Resource Exchange” 에너지 자원협력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팀장

-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여전히 에너지 자원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연간 무역량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도약했으나, 여전히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음.
 - 특히 한국의 현 산업 구조는 에너지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오일 쇼크 등 에너지 공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악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함.
-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생’과 ‘상생’의 가치관 아래 활발한 자원 외교를 이뤄나가며 파트너국과의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일방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는 데서 벗어나 협력상대로서 서로의 비교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공생과 상생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

- 예를 들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개발
국으로 남아있는 국가에게는 주요 인프라 확보와 석유화학
의 발전으로 빠른 산업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발표에서는 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의 주요 의제
였던 파트너국과의 윈윈 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한
협력 모델을 제시

제 4세션. 녹색성장, 개발·원조 이슈

- 한국은 개발·원조와 녹색성장분야의 글로벌의제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설정에서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적 연구 흐름을 살펴봄.

“Korea on the Global Stage:

A Poster Child for Aid and Development Grows Up”

글로벌 무대에 선 한국: 원조와 개발의 모범사례에서 의제설정자로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사유화·자유화·안정화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 교육·보건 등 인간개발 중심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원조에 초점을 맞춘 G8의 개발의제가 한계를 노정
- 경제개발과 인간개발, 자유화와 역량 배양, 원조와 성장을 아우르는 개발의제의 필요성 제기로 개발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다수의 성장축을 구축할 필요
 - 개도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몇 안 되는 사례로서 한국의 장점을 부각시키되 폭넓은 협의 과정을 통해 개발의제가 보편성을 갖도록 노력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로서 9개 기둥(pillar)을 제시하고 다년간 이행 계획을 수립
-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가 낮고, 그 목표와 규모 및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제기

- 2007년 기준 GNI 대비 ODA 규모를 보면 한국은 0.07%로,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평균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경제규모가 큰 미국(0.16%), 일본(0.17%)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
- 1960년대 이후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 논의는 OECD 개발원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3년 이후에는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이 개최
- ODA의 기본이념과 목표를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ODA의 규모와 구성을 확대·개선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배양할 필요
- '중기 ODA 확대계획'(2008.8)에 의거하여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노력 중
- ODA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G20 개발의제를 제시한 국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독려하고, 향후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

Green Growth and Korea's Developmental and Diplomatic Position

녹색성장에 있어 개발과 외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위

조흥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적인 목표가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생활수준을 가진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는 흥미로운 주제임.
 -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국제적인 책임의식 하에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고 아시아를 주도하는 역할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녹색성장 장려책
 -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정책적 뒷받침은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정책적 효과를 누리고 체계화된 구상을 갖도록 하는 보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특히 인센티브 정책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간 주체들이 친에너지 정책을 가진 민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의 이행
 - 인센티브를 사용한 실질적인 환경정책으로는 탄소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녹색성장의 구심점인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정책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사용

○ 한국에서는 탄소세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행이 강조되어 왔으나, 두 정책은 모두 민간 사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전략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녹색성장발전에 있어 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국회의 인정을 받은 '녹색성장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

○ 한국에서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거버넌스를 사업화시켜 한국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지켜갈 용의를 보이고, 환경규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발전된 환경정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 사회와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녹색성장이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정책적 도움을 주고 한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적 전략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함.

**“Korea's Global Leadership: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성과 및 과제**

콜린 브래드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목표로 진행

-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향상, 에너지 재생비율을 확대할 것
-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정책 간 역학관계의 전환이 요구되며, 체계적 변화를 위해 혁신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체계적 변화를 위한 국가의 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주요 경제행위자, 사회그룹, 정치 지도자들 간 협력과 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함.
- 에너지 시스템을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리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
 - 일례로 건물소유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체계를 통해 상호보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기업이 에너지 생산·저장·분배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R&D를 확대할 수 있게 예산차원으로 지원
 - 도시개발, 대중교통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핵 안전규제 개혁을 통해 핵을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녹색성장 혁신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민관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함.
-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의 전략은 경제 전반에 걸쳐 녹색개발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녹색환경을 위한 지속적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함.
 - 녹색성장 이슈를 에너지 자원대체의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경제적 변화의 넓은 시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성장, 고용, 에너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함.

- G20의 강하고 지속적인 균형적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제3 산업혁명의 5개 필러를 적용하는 등 미시와 거시를 연계해야 함.
 - 제3차 산업혁명(TIR: Third Industrial Revolution) 필러는 재생, 클린에너지 자원 및 생산규모 확대, 보수 건물에 마이크로 에너지 자원 활용, 새로운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전기차량·수소전기차량 개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
 - 미시-거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특히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세계경제가 도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전환을 위해 G20 글로벌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들의 전략적 리더십을 통해 직면과제를 수평적 접근법으로 해결해야 함.
 - 주변 분야로 확산효과가 큰 이슈이므로 한 부문에만 집중된 수직적 접근법이 아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접근법이 요구됨.

**“Korea's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국제협력 이슈**

에이드리언 휴잇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연구위원

- 대한민국은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의 임명,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중견국으로서의 이름을 다시 새기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새로 다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되는 대외원조의 지배적인 구조는 유럽의 재건 시절 쓰이던 형태로 시대착오적인 면이 없지 않음.

- OECD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신흥국들이 새로운 형태의 개발원조를 시행하는 등 관심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원조의 형태가 지배적임.
-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최근 들어 원조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한계가 있으나 신흥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국의 공조가 개발협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함.
 - 냉전 후 1990년대 초 본인이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했던 '외국원조의 위기와 전환 (1994)'이 UN에 의해 상기되고 1997년 영국정부에 의해 정책에 도입된 경험을 회상하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원조규모를 늘리고 원조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할 때 개발원조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언급한 '사회의 평면성'은 지금 우리의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잘 어울리는 개념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평면의 위치에서 책임을 공유할 것이 요구됨.
- ODI의 펠로우십 과정(Fellowship Scheme)은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당한 결실을 일군바 있음.
 -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4%까지, 시에라 리온은 34%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지역의 5~8 % 경제성장률 증가를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음.
- 교육, 건강, 수질공급 등 원조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대처하는 개발협력은 세계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수요우선의 개발협력체제는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표명하는 계기를 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